

‘빈손면담’에도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韓 “李 대표 재판결과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돼야 野 이사추천 전제조건 공감 어려워” 대통령실 “與野 합의 시 임명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

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묻자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尹-韓 갈등 파고드는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달 말, 내달 초 여야 대표 회동 전망 李 “정치 복원 될 수 있는 길 찾을 것” 韓, 특검법 합의 가능성 높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

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

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론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 제기했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선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與 “연금개혁 협조요청” vs 野 “의대 증원·자동조정장치 변질”

복지위 국감

與, 연금특위서 野·정부 함께 논의 野, 김건희 여사 참여 행사 비용 지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갑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용산(대통령실)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

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를 결정)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대기·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었다.

그는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도 아닌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700만원이 들었다”라며 “(예산으로 투입된)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전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

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 불용 예산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장식을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거나 국무위원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구 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가입 상한 연령 인상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특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

담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을 넣어서 (수령액) 자동 삭감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국민적 설득이나 홍보는 해달라”고 했다. /뉴시스